

# “이상민, 자리 지킬 자격 없다”... 민주당, 거세진 퇴진 압박

(행정안전부 장관)

野, 파면까지 거론하며 수위 높여  
김두관·강병규 전 장관 사의 표명  
與 “사태 수습 후 책임범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경찰 책임 추궁을 넘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 장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인사청문회부터 이 장관과 갈등을 빚어온 민주당은 ‘파면’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

고 “주무장관으로서 참사에 책임지기는 커녕 자리를 지키려는 뻔뻔한 버티기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 보좌를 우선하는 행안부 장관은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공직 재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며 퇴직금도 감액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은 경질되거나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혀 직을 내려놓는 수순을 거쳤다. 일례로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장관 재임 당시(2003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미군기지 침투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놨다. 박근혜 정부 2대 안전행정부(현 행안부) 수장이었던 강병규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장관으로 임명된지 한달도 안

데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후임 장관이 임명되자 사퇴했다. 반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국회의장은 사고 발생 후 당시 진도 팽목항에 136일 동안 머무르며 진정성 있게 사고를 수습했고 이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도 도전했다.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조정하는 행안부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후 설화를 빚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 수습 브리핑에서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고 했으나 김두관 의원이 3일 공개한 이태원 생활인구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엔 작년보다 2.5배의 인파가 몰렸다. 또한 이 장관은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으나,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에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녹장대응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논란이 컸던 경찰국 설치 취지로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의 책임론이 경찰을 넘어 이 장관에게 향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면 용산서장이 가장 책임이 크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정확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 정권에서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론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은 수습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면 본격적으로 문책 범위와 책임 범위가 논의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이동 하고 있다. /뉴스1

## 애도기간 술자리... 바람 잘 날 없는 정치권

하동군 군의원 연수 등 진행 빈축  
워크숍에 관광성 상품 다수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를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했으나, 일부 정치권과 공직에서 국민 감정도 따라가지 못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북 하동군의회 소속 군의원 11명은 지난 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떠났다. 당일과 지난 2일 연수를 떠난 군의원과 관계자가 복귀했으나 프로그램 자체가 ‘외유성 연수’, ‘높은 경비 책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 광산구 구청 주민자치과 소속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장도 지난 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 단양과 제천 등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워크숍 일정에 고수동굴 탐방, 청풍호 유람선 탑승 등 관광성 상품이 다수 포함돼 빈축을 샀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 해명했다. 지역구당원들과 지난달 30일 워크숍을 가서 술자리를 가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서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려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지난 1일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웃음을 지으며 농담을 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무부처장과 기초단체장임에도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설화까지 겹치며 참사 수습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바라는 국민 시선은 따가워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행 임 자체 ▲음주행위, SNS 글 자제 등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하며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박태홍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일 22시, 작년 2.5배 몰려”

김두관 의원 “국정조사·특검 가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참사와 관련해 정부 측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해명에 지난해보다 2.5배의 인파가 몰렸다는 데이터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3일 서울시로부터 이태원의 생활인구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생활 인구는 7만 24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 생활인구데이터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해 서울의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집계한 수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이태원 일대에 몰린 인파는 최근 6년 해러원 축제 기간 중 역대 최다였으며 참사 발생 직전인 밤 10시에 집계된 생활인구 집

계 데이터 역시 밀집도도 최고였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파가 몰렸다는 정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책임회피 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였던 2017년 같은 시간 기준 7만 1601명보다도 840여 명이 더 많았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2.5배 이상 인파가 몰렸다. 특히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인 밤 10시에는 밀집도가 정점을 찍었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있던 2021년을 제외하면 일관되게 해러원 축제에서 밤 9시~10시 전후가 가장 붐볐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예고와 객관적인 데이터 등이 있었음에도 예년과 비슷한 인파가 몰리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본 정부의 시각은 판단 착오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정진석 “韓日갈등, 해결할 능력·의지 충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일·일한의원연맹 창립 50주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일·일한의원연맹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을 우리는 수습하고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히 있다”며 양국협력을 강조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및 한일의원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한일관계가 순조롭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대의 고비가 이어지던 시간”이라며 “역사문제에서 시작된 양국 갈등 양상은 과거 양국관계가 고어던 상황으로 내몰리더라도 건드리지 않았던 경제협력과 안전보장협력에 균열을 만드는 지경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행히 양국에 각각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그동안 양국

은 관계 악화의 책임을 상대에게서만 찾았던 것은 아닌지,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환원으로 반성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의 고리를 풀어내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과 해법만으로는 어려운 것이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의 가치관과 기준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협력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 “유가족·부상자 도움 통합지원센터 설치”

尹 “애도기간 후에도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참사와 관련해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에서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을 곁에서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참모들을 향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총리실 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질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망자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원스톱으로 한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가족과 부상자, 참사 현장 목격자와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국민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박정익 기자